우리 화섬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2)

1.1.2. 경제발전의 제국면(諸局面)

(가) 발전정책

2차대전 후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제공된 정책처방을 우리는 제도적, 정책적, 전략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제도적인 면에서 신생국가에 제시된 처방은 시장경제적 발전과 계획적 개발,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적 경제발전과 공산주의적 경제발전이라는 경쟁적, 상호배척적 두 가지 방안이었다. 얀 틴베르헨(J.Tinbergen) 표현대로 하면 개발도상국이란 환자에 대하여 동(東)의 의사와 서(西)의 의사가 서로 완전히 다른 처방을 제시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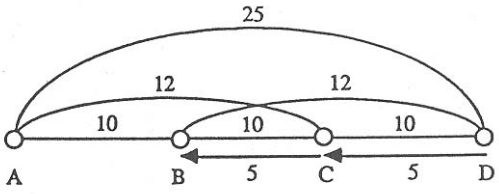
정책면에서도 두 가지 다른 길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는 저축 투자접근(saving-investment approach)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수요접근(basic needs approach)이었다. 저축 투자접근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자본이고 개발도상국이 저개발 상태에 있는 것은 자본부족 때문이므로 원조 또는 차관 등 형식으로 자본공급을 증대시키면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이 가속화 된다는 견해이다.

이에 반하여 기본수요접근은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주체는 인간이므로 영양, 보건위생, 교육 등 인간적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자본원조를 통하여 기계 등 물적 자본을 마련하여 주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발전전략 면에서는 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이라는 대립되는 처방이 제시되었다. 균형성장론은 알. 넉시(R.nurkse) 등이 주장한 것으로 특정한 한가지 상

품 또는 산업의 성장 및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성장은 반드시 수출상대국과 시장분규를 일으킨다. 그럴 경우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선진국 수입규제 정책으로 말미암아 수출을 통한 성장은 한계에 부딪친다. 따라서 국내산업간에 산업연관적 균형을 유지하는 성장전략이 개발도상국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불균형성장론자들 주장은 다음과 같다. 산업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시키려면 관련산업 전부에 적정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부족이라는 개발도상국 경제여건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대신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전후방 연관관계와 자본소요가 있을 때 A→B→C→D를 차례로 건설하는 균형성장 전략을 취하면 총자본지출은 30이다. 이에 반하여 B를 건너 뛰어 C부터 건설한 다음 B를 건설하는 A→C→B→D란 불균형성장 전략 또는 A, B를 건설한 후 C를 건너뛰어 D부터 건설한 후 C를 채워 넣는 A→B→D→C란 불균형성장 전략은 모두 27밖에 자본지출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1.1> 불균형성장 전략

이 기간 중 우리나라는 서방진영에 속하게 된 모든 개발도상국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발전방향을 취하였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전쟁과 같은 열전(熱戰)까지 치룬 다음에도 가장 첨예한 냉전적 대립상황에 있었던 당시의 정치 군사상황상 어떠한

체제적 타협도 할 수 없었다는 사정에도 크게 연유한다. 이 점은 베를린 봉쇄등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체제적 일탈(逸脫)을 할 수 있었던 서독과는 크게 대비된다.

발전정책면에서는 저축 투자접근이 지배적이었지만 기본수요접근적 요소도 상당 정도 있었다. 발전정책의 주류는 이 기간 중 3,135백만 달러란 방대한 무상원조를 제공한 미국의 정책 태도에 압도적으로 영향 받아 물적 자본에 주로 의존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그러나 동시에 1953년 현재 67달러라는 적은 1인당 GNP로 대표되는 낮은 생활수준을 높여주기 위하여 농업, 공업 등 생산과 수출, 수입 등 무역에서 모든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 결과 1961년에는 1인당 GNP가 82달러로 커지고 85.1%이던 노동소득비율(피용자보수 + 비법인기업소득)도 1957년에는 88.7%로 커지는 등 분배구조도 개선되었다. 비록 의도적 의식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같은 결과는 다분히 기본수요충족 접근적 성격을 가진 개발정책 탓이라고 할 수 있다.

50년대 말에 오면서 균형성장 전략과 불균형성장 전략 간에 논쟁이 일기 시작하였지만 이들이 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62년 이후이다. 이기간 중에는 한편으로는 극도로 저하된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방대한 국방비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소비재중심으로 공업화가 추진되었고 이 같은 공업건설과 또 파괴된 주택,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복구를 위하여 시멘트, 판유리 등 또 농업생산성 상승을 위한 비료 등 일부 중화학공업이 기간산업으로서 육성되었다. 이 중 섬유공업은 1957년부터 목재공업은 1960년경부터 주요한 수출산업으로 성숙하여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상당기간 동안 선도하게 된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본다면 이 기간 중 공업화 전략은 불균형성장적이었다고 하여야 한다.

(나) 투자재원 조달과 배분

해방에서 휴전에 이르기까지 8년 간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 해외동포귀국과 북한피난민으로 인한 인구 급증, 기계 원료 전력 등 투입재(投入財) 부족과 전쟁 비용지출, 전쟁으로 인한 파괴 등으로 말미암아 생산과 투자는 극도로 위축되었었다. 한국산업은행 자료에 따르면 1946년의 공업생산은 1939년에 비하여 28.8% 수준에 불과하였고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섬유공업도 39.7% 수준이었다. 또 다른 산업은행자료에 따르면 1941년에 대비한 1948년의 공업생산활동은 공장수는 40.3%, 종업원수는 29.2% 감소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섬유공업이 겨우 현상을 유지하고 화학공업이 약 40%정도 성장하였을 뿐 나머지 산업은 모두 1941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따라서 1945~52년간에는 생활수준도 1939년 수준을 밑돌았고 저축능력도 현저히 저하되어 확장투자는 전혀 불가능하였고 저축은 대체투자(대체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같은 낮은 저축능력은 국민소득이 추계되기 시작한 1953년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1953~61년 평균 국민저축률은 4.1%에 불과하였다. 그것도 민간저축률은 연평균 6.7%였으나 정부는 과중한 국방비부담 등 재정수요 때문에 마이너스 2.6%라는 초과지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만 1945~52년간에 총 852.5백만 달러, 연평균 106.6백만 달러이던 무산원조가 이 기간 중에는 총 2,282.5백만 달러, 연평균 253.6백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해외 저축률이 연평균 8.0%에 달하여 매년 12.1%라는 총 저축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같은 국내외 원천으로부터의 저축공급에 힘입어 이기간 중 총투자율은 연평균 12.4%를 실현할 수 있었다.

경상가격으로 본 총투자규모는 1,891.3억 원으로 그 중 86.5%에 해당하는 1,636.8억 원이 고정자본 형성에 배분되었다. 이를 다시 자본재형태별로 보면

주택, 비거주용 건물 및 기타 구조물 공작물에 대한 투자가 가장 컸고 기계설비투자가 그 뒤를 이었고 운수설비투자는 적었다. 이는 생산과 소득이 매우 낮아 여객과 화물에 대한 수송수요가 작았기 때문이다.

산업용도별 고정자본 형성을 보면 농림수산업 및 광업 채석업 등 채취산업(extractive industries)에 대한 투자는 13.9%에 불과하였다. 이는 이 기간중 농림수산업 및 광업 채석업의 부가가치 구성비가 43.1%였음을 생각한다면 매우 작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투자재원 조달과 배분(1953~61)

원천별저축[1]	총 자 본 형 성					
	형태별	금액 (억원)	구성비 (%)	산업별	금액 (억원)	구성비 (%)
국내저축 4.1%	고정자본형성	1,636.8	86.5	채취산업	22.7	13.9
민 간 6.7%	주택·건물	1,105.1	67.5[2]	제조업	353.9	21.6
정 부 -2.6%	운수설비	136.3	8.3[2]	사회간접자본	1,055.3	64.5
해외저축 8.0%	기계설비	395.4	24.2[2]	좁은 SOC	46.2.6	28.3
총저축율 12.1%	재고증가	254.5	13.5	넓은 SOC	592.7	36.2
총투자율 12.4%	총자본형성	1,891.3	100.0	총 계	1,636.8	100.0

1) GNP에 대한 비율임

2) 고정자본형성에 대한 비율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4.

평균 12.1%의 부가가치 구성비를 갖고 있던 제조업 분야에는 21.6% 해당하는 353.9억원 투자재원이 배분되었다.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부문에는 64.5%란 투자재원이 투입되었는데 이 부문에 대한 총투자 1055.3억원 중 건설, 운수통신 등 좁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에는 43.8%가 배분되었고 나머지 56.2%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금융 보험 부동산 등 기타 서비스산업을

위하여 지출되었다. 이 기간 중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구성비는 44.8%였으므로 이 부문에도 제조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자금이 배분되었다.

(다)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이 기간 중 달러표시 GNP누계액은 15,191백만 달러이므로 무산원조 총액 2,282.5백만 달러는 GNP 대비 15.0%에 해당한다. 이처럼 방대한 원조자금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54~61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0%에 불과하였다. 총투자율 12.4%에 성장률 4.0%가 대응한다는 것은 투자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투자의 성장효율이 낮은 이유로는 첫째 사회간접자본 특히 전력의 부족으로 인한 생산효율 저하, 둘째 자본의 회임기간(懷妊期間)이 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편중투자로 인한 단기적 효율 저하, 셋째 몇 개 경공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조업의 자기완료성 결여로 인한 낮은 전후방 연관효과, 넷째 경공업중심의 공업구조로 인한 낮은 성장탄력성, 다섯째 생산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경제행정 관리면에서의 기술부족으로 인한 낮은 효율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근복적인 문제점으로는 국내생산과 원조의 상당부분이 비생산적인 국방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방대한 국방비 지출로 말미암아 정부재정은 항상 적자이었다. 이로 인하여 재정 인플레이션이 발생, 경제의 안정성장을 저해하였고 <표 1.1>에서 보듯 이 기간 중 정부저축은 마이너스 2.6%로 민간저축의 3분의 1이상을 잠식하였다.

산업별 성장률을 보면 농림수산업은 연평균 3.6%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흉작으로 인한 세 번의 마이너스성장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산업 중 가장 높다고는 하지만 제조업 성장률이

11.2%에 불과한 것을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첫째 전력, 수송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애로(隘路)가 컸다는 것과 둘째 섬유, 식품, 목재 등 극히 제한된 소비재공업에서만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었다는데 기인한다. 사실 후자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제조업 부가가치 구성비가 10.0%에 불과한 1959년에 소비재공업을 중심으로 과잉생산 공황이 일어났던 것이다. <표 1.2>가 말해주듯 사회간접자본부문 성장률이 가장 컸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파괴를 한국 경제는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조업 성장률이 가장 컸음에도 불구하고 1953~61년간에 그 부가가치 구성비는 5% 포인트 커져 1961년에 있어서도 2차 산업이나 서비스산업보다 작다는 후진적 산업구조를 면할 수 없었다. 다만 1953년에 1차 산업 > 서비스 산업 > 2차 산업이던 관계가 1958년부터는 서비스 산업 > 1차 산업 > 2차 산업으로 바뀌어 산업구조는 약간 선진형으로 개선되었다.

<표 1.2> 경제성장과 구조변화

(단위 : %)

구 분	성장률	산업구조		
	1954~61	1953	1961	1953~61평균
국민총생산	4.0	100.0	100.0	100.0
1차산업	3.6	47.3	39.1	41.6
2차산업	11.2	10.1	15.5	13.6
서비스산업	3.6	42.6	44.8	45.4
(사회간접자본)	11.4	3.8	8.0	7.2
(기타서비스)	2.7	38.8	36.8	38.2

자료 :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 1984.

(라) 무역과 자본 협력

1953~61년 중 수출은 염평균 10.0%씩 성장하여 1952년에 27.7백만 달러였던 수출고가 61년에는 40.9백만 달러로 커졌다. 수출이 국민 총생산보다도 빨리 성장한 까닭에 같은 기간 중 수출의존도는 3.2%에서 6.3%로 커졌다. 이 기간 중 수출 누계액은 238.6백만 달러였다.

같은 기간 중 수입 신장률은 7.8%로 수출 신장률을 밑돌았으나 수입 의존도는 9.8%에서 14.9%로 커졌다. 절대액으로는 214.2백만 달러에서 243.3백만 달러로 커졌고 누계액으로는 3,100.1백만 달러였다. 그 결과 이 기간 중 무역적자 총액은 2,861.5백만 달러였다. 그러나 총수입의 74.2% 무상원조에 의한 수입이었으므로 무역적자 순액은 560.7백만 달러로 줄어든다. 이 기간 중 무역의 계정에서 954.4백만 달러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외환 보유고는 52년의 81.4백만 달러에서 61년에는 205.2백만 달러로 오히려 증가할 수 있었다.

수출상품 구조는 1차 산업중심인 국내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1차 산품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으며 중화학공업제품 수출은 지극히 미미하였다. 한편 후진국은 농업부문에 있어서조차도 후진적이라는 경제발전 이론이 그대로 들어맞아 수입도 태반이 1차 산품이었는데 쌀, 밀등 곡류, 양모, 원면 등 섬유산업원료, 목재, 석유류 등이 1차 산품 수입의 주종을 이루었다.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외환 수요가 컸던 까닭에 당장의 소비수준을 높이는데 외환을 지출할 수 없어 경공업제품 수입비중은 상품류 별로 보았을 때 가장 낮았다.

<표 1.3> 무역구조(1955~61평균)

(단위 : %)

구분	상 품 별			지 역 별			
	1차산품	경공품	중화공품	아시아 (일본)	유럽	남북미 (미국)	기타

수출	83.8	14.7	1.5	64.8 (50.5)	11.2	21.7 (21.6)	2.3
수입	44.1	22.2	33.7	21.2 (13.1)	16.9	58.7 (56.5)[1)]	3.2

1) 1956~57년의 국별미상분을 다른 연도비율에 따라 미국에 귀속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 연호.

무역은 교역 양당사국 GNP 크기에 비례하고 지리적 거리에 역비례할뿐 아니라 정치적 친소에도 좌우된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1953-61년간 한국무역의 지역 구조에서도 여실히 들어났다. GNP 규모가 이 기간 중 21억 달러를 겨우 넘겼으므로 수출과 자력수입(총수입에서 원조수입 기타를 제외)만을 합한 크기는 GNP의 평균 6.2%에 불과하였다. 무역규모는 GNP 규모에 비례한 것이다.

한편 지역별 구조를 보면 수출입 총액 중 아시아주가 차지하는 비율은 24.3%로 유럽의 16.5%보다는 크지만 남북미주의 50.6%보다는 작다. 특히 무역 총액 중 미국의 비중이 54.0%로 과반을 차지하고 다음이 일본으로 거의 유럽 전지역과 맞먹는 15.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정치적으로, 일본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었다. 한가지 특기할 것은 수출에서는 일본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수입에서는 미국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대미수입이 큰 것은 미국이 무산원조 제공국가였다는 단순한 사실관계에 기인하지만 대일수입이 13.1%로 매우 낮다는 것은 50년대의 한일간 정치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45~61년간을 통하여 제공된 원조는 총 3,135.0백만 달러인데 이 중 미국원조가 3,012.9백만 달러이고 UNKRA원조가 나머지 3.9%인 122.1백만 달러이었다. 미국원조는 1945~49년까지는 구휼적 성격이 강한 GARIOA원조 뿐으로 그 규모는 502.1백만 달러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ECA원조 등으로 성격이 바

뀌어 109.2백만 달러가 공여된 다음 휴전 이후에는 ICA원조로 바뀌어 본격적인 경제부흥을 돕게 되었는데 그 규모는 1,741.6백만 달러이었다. 1956년부터는 미 공법(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가 시작되어 1956~61년간에 262.6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잉여농산물 무상원조가 있었다. 이 밖에도 CRIK원조 457.4백만 달러가 제공되었는데 이는 순전히 구휼용 원조였다.